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5467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박○○
피 고 ○○시장
변 론 종 결 2025. 6. 19.
판 결 선 고 2025. 7. 17.

주 문

1. 피고가 2023.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37,774,980원, 농어촌특별세 11,700,4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 2021. 5. 17. 설립될 당시부터 2023. 2. 13.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나.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될 당시 발행주식 총수는 60,000주(1주의 금액 5,000원)이었고, 그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30,000주(50%), C이 30,000주(50%)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주주명부에 C 소유로 기재된 주식 30,0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1. 7. 2. 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이전받았다(이하 '이 사건 주식 이전'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이전으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주식보유비율 100%)가 되었음에도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에 따른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3. 6. 1.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4항,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산출된 취득세 137,774,980원, 농어촌특별세 11,700,470원 합계 149,475,45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3. 8. 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6.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원고는 2021. 7. 2. C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주식 이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지분은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이전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새로이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과점주주란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정한 바와 같이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질과세의 원칙 중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義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義자를 납세의



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 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여부 역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3, 9, 11, 15, 1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2021. 7. 2.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 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의 명의로 회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주식 이전으로 인하여 원고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 비율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C이 이 사건 주식의 주금을 납부하였다거나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주주권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는 반면,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납입자본금 300,000,000원 중 160,000,000원은 원고의 계좌에서 출금되었고, 140,000,000원은 원고의 모 D(을 제6호증 9면)의 계좌에서 출금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사 설립 시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인수를 위한 인수가액 납



입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일 이후인 2023. 2. 13.까지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회사를 지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의 배우자 E도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설립부터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이전할 때까지 C이 이 사건 회사의 주요 직책을 맡았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C은 2022. 12. 31. 원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전체에 해당하는 60,000주를 양수한 이후인 2023. 2. 13.경에야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③ C과 원고는 2021. 5. 17.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다는 취지의 주식명의신탁약정서를 작성하고, 2021. 7. 2.에는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주식명의신탁 해지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 약정서가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원고가 2021. 7. 2. 이 사건 주식을 이전받을 당시 C에게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2021. 7. 2. 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원고의 주식 비율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19

재판장 판사 김○○

판사 김○○

판사 장○○



별지

관련 법령

■ 구 지방세법 (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 (과세표준)

④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종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3. 제7조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4항에 따른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



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 (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끝.